

광주도 분양원가 공개

9월부터 모든 아파트...광산구 등 투기지역 주택대출 1인1건 제한

1·11 부동산대책 발표

오는 9월부터 광주지역의 모든 신규 아파트에도 분양원가가 공개된다. 또 광주 광산구 등 투기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을 1인당 1건만 허용하고, 전국 시·군·구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분양승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어서 신규 분양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11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공공 아파트에만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권을 비롯, 지난 2003년 부산·대구·울산·창원 등과 함께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전역이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분양원가 공개를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은 거친 택지비, 작·간 집 공사비, 설계비 등 7개 항목의 원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9월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오는 12월 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소급 적용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민간택지의 분양가를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택지비+기분형 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분양가의 경우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함으로써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 이는 아파트 신축 허가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함으로써 분양원가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또 현행 공공택지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 소유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와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은 이날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광주 광산구 등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출 중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으로부터 1년내에 전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여야 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과학 봉사활동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사회복지법인 광주애육원 어린이들이 11일 오후 애육원에서 열린 로켓 발사 시범을 신기하고도 즐거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날 시범은 광주지역 과학 교사와 교수들로 구성된 '광주과학활동봉사대'에 의해 이뤄졌다. /서명주기자 mjna@

광주·전남 의료급여 1,100억 못받아

정부, 3개월째 지급 미뤄...병원들 '흑자 부도' 위기

전남지역에서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P원장은 최근 병원 업무는 뒷전으로 미룬 채 금융기관을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다.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들이 많아 매년 흑자 경영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급여 비용 25여억원이 몇 달째 체납되면서 병원 경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대신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비용이 3개월 가까이 체납되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병·의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11일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와 전남지역 의료기관에 체납되고 있는 의료급여 비용은 무려 1천100억원에 이른다. 가운데 전남도가 750여억원, 광주시 360여억원이다.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도의 경우 전체 인구의 70%가 의료보호 수급권자에 포함돼 있어 의료 급여 체납액이

광주보다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병원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보호 수급 대상자인 전남지역 상당수 병·의원들은 의료 급여분을 매우지 못해 '흑자 부도'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전남도에 M병원은 평균 매월 11~12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30여억원의 의료급여가 체납되면서 금융기관의 '의료기관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고육책에 몰리고 있다. 직원 급여·의약품 구입 등 당장 병원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매월 이자만 400만원이 넘는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 쓰고 있다.

심지어 일부 병원들은 사채까지 끌어쓰고, 폐업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정부가 의료보호제도에 투입한 의료급여 예산은 3조2천371억원으로, 2003년 2조2천120억원에 비해 23.7%가 늘었다. 의료급여는 국비 70%, 시·도비 14~16%, 시·군비 4~6%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급여 예산은 지난해 10월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새해 들어서도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최대 15%까지 밖에 되지 않는 의료보호 수급대상자들이 무분별하게 병원을 이용한 점도 있지만, 정부가 무분별하게 의료보호 대상 및 의료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매년 정부의 의료급여 본 예산이 부족해 추경예산으

로 충당해왔지만,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의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3개월 정도의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지역 L병원 원장은 "의료급여가 언제 지급된다는 보장이 없고, 설사 지급되더라도 몇 개월씩의 밀린 이자분은 보상받을 수 없어 의사가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는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는 1종 수급자와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는 2종 수급자로 분류된다.

최관원기자 cki@kwangju.co.kr

“개헌 도움된다면 탈당할 수도”

盧대통령 “부결돼도 임기단축 안해”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안이 부결되더라도 중도 하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야당들이 개헌 전제조건으로 탈당을 요구한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안 부결시 중도 하야 가능성 논란과 관련, “내가 개헌안에 신임을 걸었을 때 그걸 불신임인데, 여기에 신임을 걸지 않는다”며 “개헌안이 부결된다는 것을 (대통령)불신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중도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개헌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역사적 책무”라면서 “대통령으로서 책무로서 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신임을 걸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추진을 위한 열린우리당 탈당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당적 문제는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열어놓겠다”고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해 “개헌과 선거구제 모두 한나라당이 반대하지만 선거구제는 일정 지역에서의 독점권이 있는 정당에 결정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다른 교환 조건이 없는 한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노대통령이 개헌논의 거부는 민주주의의 거부”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반대 여론을 거스르며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임동욱기자 tuim@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일보 은펜상’ 2006년 12월 수상자 송민석 씨

‘광주일보 은펜상’ 2006년 12월 수상자로 송민석(60·여천고 교장)씨가 선정됐습니다. 송 교장은 지난해 12월 18일자 ‘교사 분발요인 교권 없다’는 기고문을 통해 공교육을 개선시키고 교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송 교장에게는 광주일보 마크가 새겨진 은촉만년필을 드립니다.

유한양행 www.yuhan.co.kr
광고심의의뢰 : 889-1000

초기감기 퇴장! 콘택골드!

초기 감기약 - 콘택골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 걸렸거나 생각되면 초기 감기약 콘택골드로 퇴장시키세요!
불청객 감기의 파를 플레어인 콘택골드를 잊지마세요!

특허번호 제44-18888호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062-382-5400 (대) 062-382-0615 (국) 049-527-3033 부산 051-862-4071